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지역개발연구부 이성재 연구위원
(063-280-7153)
- 담당 : 연구본부장 이강진 선임연구위원
(063-280-7141)

보도시점 : 2022년 04월 *일부터

14개 시군별 인구이동특성을 고려한 인구 대응 방안 수립해야

-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전북의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과 대응 방안』이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 정부는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21.10월)한 후 인구감소대응기금을 편성(년간 1조원, 10년)해 지역에서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10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 전북의 시군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세밀히 분석해 지역 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전북 14개 시군별 인구이동 특성에 기반한 인구정책 방안을 제시한 전북연구원의 이슈브리핑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전주·군산·익산 3개 시의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은 전북 전체의 82.3%, 충청권으로의 순유출은 전북 전체의 67.62%를 차지함에

따라 전주·군산·익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직업과 교육 부문의 지역특화형 인구정책으로 정주민구의 전출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 진안·무주·장수 등 동부권 지역은 전출보다 전입이 많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감소(전입-전출)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연감소(출생-사망) 주 요인인 출산을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 순창·고창·남원·정읍 등은 광주전남권, 장수·무주 등은 영남권으로부터 전입이 많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따른 권역별 전입인구 확대도 전라북도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 그리고 최근들어 완주·진안·무주 등을 중심으로 충청권과의 인구가동이 증가하고 있어 전북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행정수도 배후거점을 조성해 유동인구, 체류인구 등 관계인구 유치를 통한 인구활력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연구책임자인 이성재 박사는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인구증대에서 인구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정주민구의 유출을 최소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전북을 방문하는 관계인구를 최대한 늘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시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